

국민 안전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행안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강원산불·형가리 유람선 침몰 여파

올해 잇따라 발생한 강원 산불과 형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3세 이상 전국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민 안전의식 조사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의식 설문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55%다.

먼저 올해 상반기 일반국민의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는 2.65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2.74점)에 비해 하락(0.09점)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3.4월), 강원 산불(4월), 형가리 유람선 침몰사고(5월)의 영향으로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지난해 하반기(2.77점)에 비해 0.23점 상승했다.

재난안전 분야별(13개) 안전체감도의 경우에도 2018년 하반기와 비교해 대부분 낮아졌다.

△원전사고(2.89점, 전년대비 0.12점 ↓) △자연재난(2.76점, 전년대비 0.1점 ↓) △화재(2.61점, 0.09점 ↓) △안보위협(2.74점, 0.2점 ↓) △환경오염(2.19점, 0.11점 ↓) 등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새롭게 조사한 인식도에서는 거주지역 내 지진옥쇄피소 등 재난안전 대피시설에 대해 일반국민 36.5%, 전문가 53.6%가 알고 있었다. 재난안전 행동요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의 경우 폭염(72.4%), 화재(71.1%), 지진(70.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안전 실천도'에서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차용률은 89.5%를

기록, 안전의식 차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 10% 수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일반국민 44.9%, 전문가 59.1%가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안전의식이 낮은 분야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안전대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나주 SRF 열병합발전 손실비용 4차 협의서 마련키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의 최대 고비였던 손실비용 마련 방안이 가닥을 추리면서 사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갖고 LNG로 연료광식 전환에 따른 손실보전비용과 발전소 폐쇄로 결장할 경우 매출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별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민관 거버넌스 회의는 이날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날 회의의 결과는 조만간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이를 의결할 경우 30일 예정된 13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

성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험가동기간과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끝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하거나 발전소 폐쇄로 결장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비용과 매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손실보상 주체가 불명확한 점, 자칫 이사회와 담당직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주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뉴스1

광주 북구의회, 춤 허용

업소 관리실태 감사 요구

광주 북구의회가 북구지역 내 춤허용업소의 영업실태와 감독관리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 간담회를 열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실태 점검 후 북구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춤 허용 조례에 따른 북구청의 관리감독 현황 전반을 상임위 자체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북구 자체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해당 조례 검토를 위해 유사조례가 있는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조사했다.

또 북구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32페이지 분량의 간담회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 업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주력해 왔다.

관련 부서인 위생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북구지역 내의 춤허용업소의 영업실태와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제도 운영상 허점,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북구청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잠수교에서 신나는 에어비운스

서울 잠수교가 제100회 전국체전 D-50행사장으로 변신했다. 15일 오후 전구간 차량이 통제로 잠수교에 설치된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 에어비운스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5·18은 北특수작전' 지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조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보수논객 지만원씨(77)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지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을 요구해 삭제하도록 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녀자들을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삭제조치에 반발한 지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방심위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5·18운동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

씨는 설득력 없는 증거 없이 이를 정면 부정한다"며 "지씨의 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게시물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방심위 시정요구가 적당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법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뉴스1

이슈 판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 유죄 인정 위법”

향소심 재판서 벌금 700만원→300만원 감형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향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성폭력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씨(27)에 대한 향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6일 오전 3시쯤 전남 목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B씨(22·여)의 몸을 만졌다.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강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한 만큼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